



‘가짜 뉴스’ 대응책 고민하는 정치권 · 언론계

김지현 / 골드스미스 런던대 문화연구 박사과정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은 전직 영국 정보 요원에 의해 작성된 일명 ‘트럼프 문건’의 유출에 쏠렸다. 문건 유출과 문건이 미국 정보국으로 전달되는데 영국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국 정치권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 ‘가짜 뉴스’다. 지난 미 대선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 보도 및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대한 규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문건’ 유출 논란

올 1월 중순, 미국 CNN과 버즈피드의 보도에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생활과 러시아의 관계를 폭로하는 이른바 ‘트럼프 문건’ 파동이 영국 정부의 연루설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5쪽에 달하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스틸이 영국 정보기관(M16)의 전직 요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미연방수사국(FBI)과 접촉해 문건을 넘기는 과정을 영국 정부가



사건의 중심에 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일은 정치 공작의 결과이고 언론의 보도는 “헛소리”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새로운 트위터 계정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복제 및 무단사용 금지〉

인지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정부는 영국 정보기관이 러시아와 트럼프를 동시 겨냥해 문건을 유출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스틸이 여전히 영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직접 공식 석상에서 문건을 유출한 스틸은 영국 정부를 위해 “수년간 일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일체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메이 총리는 1월 13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문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영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문건을 작성한 스틸과 영국 정부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진위와 상관없이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 선 트럼프의 대응도 논란을 확대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일은 정치 공작의 결과이고 CNN을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헛소리”이며 문건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는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1월 14일에 열린 당선 이후 첫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문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문건을 작성한 스틸과 영국 정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캡처〉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약점이 잡혔다고 보도한 CNN 기자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며 그 기자가 던진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트럼프의 비판은 그가 매체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지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기성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 즉 인터넷에서 정치권의 흑색선전용으로 생산되거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된 거짓 정보, 허위 기사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가짜 뉴스’ 유통, 누구 책임?

후자에 해당하는 ‘가짜 뉴스’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 영국 언론의 중론이다. 온라인 광고 수익을 노리며 자극적인 소재의 ‘가짜 뉴스’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웹 사이트까지 여러 개 만들어지면서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와 이용자 참여 콘텐츠가 전문가 콘텐츠와 함께 유통되는 버즈피드 같은 신생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대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가디언은 버즈피드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대선 기간 중에 월평균 20억 명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 ‘거짓된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스트 중 38%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우파 사이트로부터 나온 반면, 민주당 지지 사이트를 통해서만 상대적으로 적은 19%만이 나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야말로 ‘가짜 뉴스’의 수혜자였다고 분석했다. 또 이 신문은 트럼프는 기존 매체를 믿지 말라고 지지자들에게 열변을 토하는 한편

힐러리 클린턴(이하 힐러리)의 건강 문제 등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뉴스와 음모론을 대신 기간 내내 언급하는 등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의 가짜 정보 전파에 대해 연구한 컴퓨터 과학자 윌터 쿼트로치오는 가디언과 인터뷰하면서, “트럼프는 (가짜 뉴스 문제에서 힐러리를) 이긴 것”이라며, “그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제도적인 권력 안에서 모든 불신을 끌어모아 제공했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페이스북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구글과 페이스북 두 업체가 뉴스를 유통, 매개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하며 투명성에 대한 조사 및 법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를 비롯해 허위 사실이 페이스북에 공유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 메뉴를 신설하는 한편, 뉴스 전문 조직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BC의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 ‘팩트체크’ 메뉴는 1월 말에서 2월 초, 의원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트럼프 문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영국 보수당 내각은 신문업계 수장들에게 이에 대한 언론계의 입장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가디언의 1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맷 헨콕 장관은 신문사 대표들에게 하원에서 열릴 원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전직 문화부 차관이자 현재 노동당 의원인 마이클 더저는 ‘가짜 뉴스’가 야기하는 윤리적, 정치적, 실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테크놀로지 거인들의 지배력”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이 “뉴스에 접근하는 창구들” 복잡함으로써 뉴스 소비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정부가 이러한 복잡 구조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가짜 뉴스’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만 ‘가짜 뉴스’의 판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BBC는 “BBC가 인터넷 전체를 편집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위시한 인기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기사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하딩 BBC 뉴스본부장은 ‘리얼리티 체크’팀을 전략적으로 신설, 공적인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팀은 ‘명백하게 허위인 정보’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 의해 생산됐지만 대중을 호도하는 기사의 소셜 미디어 유통 역시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BBC는 페이스북과 협업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 구조 개혁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의 이러한 접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트럼프가 문건 유출을 보도한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지목했듯, 그리고 대신 기간 내내 기성 언론을 비판한 트럼프의 당선이 시사하는 것은 뉴스 생산과 유통에서 전문가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의 ‘가짜 뉴스’ 급증을 러시아 정부와 연루된 정보 조직의 음흉한 책략, 특정 정치 세력의 검은 손에 의한 것으로 믿는다거나, 그로

“

모로조프가 진단하는 ‘가짜 뉴스’ 급증의 근본 원인은 클릭과 ‘좋아요’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내러티브로 온라인 광고 수익을 올리는 소셜 미디어의 기사 유통 구조, 또 그러한 구조를 가능케 한 디지털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 모델에 있다.


”

인한 문제를 기성 언론의 ‘팩트체크’에 의해서 해소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가짜 뉴스’ 생산과 매개를 ‘조건 짓는’ 디지털 자본주의에 적합한 비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유럽 출신 언론인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평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에브게니 모로조프는 지난 1월 8일 가디언에 쓴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즉, ‘가짜 뉴스’ 논란을 이용자에 의한 인터넷 담론 생산의 규제, 소셜 미디어의 ‘팩트체크’ 개발 촉구 등으로 일단락하는 것은 기존 저널리즘 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소셜 미디어의 매개 활동에 더 큰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로조프가 진단하는 ‘가짜 뉴스’ 급증의 근본 원인은 클릭과 ‘좋아요’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내러티브로 온라인 광고 수익을 올리는 소셜 미디어의 기사 유통 구조, 또 그러한 구조를 가능케 한 디지털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 모델에 있다. 모로조프는 “가짜 뉴스가 만드는 위기가 크렘린궁전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적 비판은 “디지털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드는 경제 모델의 위험성에 눈감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는 가짜 뉴스로 인해 역사할 수도,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엘리트의 위선은 역사할 것이다”라며 기존 전문가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고려하는 주류 언론의 성찰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를 웹 등장 이후 저널리즘 분야에서 나타난 ‘대중의 아마추어화(Mass Amateurization)’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모로조프의 문제 제기인 아마추어 저널리즘의 문제점은 정부 규제나 전문가 주도하의 재매개로 해결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성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영국 노동당이 제안했듯, ‘가짜’가 그럴듯하게 생산되고 매개되는 과정, 또한 그에 연루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독점적 지위를 지닌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공개가 불가피하다. 영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디지털 저널리즘의 구조를 개혁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1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1/11/former-mi6-officer-produced-donald-trump-russian-dossier-terrified/>
- 2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theresa-may-reject-russia-claim-mi6-behind-dirty-dossier-president-elect-donald-trump-british-a7526251.html>
- 3 <https://www.nytimes.com/video/us/politics/100000004865825/trump-calls-cnn-fake-news.html>
- 4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partisan-fb-pages-analysis?utm_term=.qy25KwBjr#.gw5e4PLak
- 5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nov/10/facebook-fake-news-election-conspiracy-theories>
- 6 지현(2017. 1.), “온라인 광고 장악한 구글·페이스북에 비판 고조”, <신문과방송> pp. 97~100.
- 7 <http://www.bbc.co.uk/news/business-38631847>
- 8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jan/13/fake-news-expose-labour-party-inquiry-start>
- 9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jan/12/bbc-sets-up-team-to-debunk-fake-news>